

[종합·해설]

정치권, 김경준씨 '귀국 저지' 공방

<BBK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증인>

신당 "무얼 감추려 귀국 막으려하나"
한나라 "법절차 과잉해석... 막은적 없다"

국감 파행 위기... 대선변수로 부상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14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측이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경준 씨의 귀국을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을 놓고 팽팽한 공방전을 벌였다.

김경준씨가 한국 송환 명령에 대한 항소 취하신청을 내고 한국으로 돌아와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명박 후보 대리인인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가 미국 법원에 김씨의 항소 취하에 대한 판단을 미뤄달라는 판결유예를 신청해 사실상 귀국을 자연시키려 한다는 최근 언론 보도가 공방의 도화선이 됐다.

이를 놓고 "신당은 이명박 후보가

몇몇하다면 김경준씨의 귀국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는 이유가 뭐니"며 공세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미국 현지에서 진행되는 정당한 법절차를 신당이 정치적으로 과잉해석하고 있다며 '귀국방해'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신당의 이나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가 BBK 사건에 원가 단단히 엮여있는 게 틀림없어 보인다"며 "이 후보의 미국내 소송대리인들이 이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주장하는 김경준씨의 귀국을 저지하고 있는데 이 후보가 진정으로 BBK 사건과 무관하다면 김씨의 조기귀국이 이뤄지도록 돋는 것이 옳다"고 말했

다. 이 대변인은 또 "이 후보는 지난 12일 영남일보 인터뷰에서 '김경준씨는 빨리 한국에 들어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후보의 소송 대리인들은 정반대로 김씨의 귀국을 저지하고 있다.

이 후보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국회 정무위에서 BBK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반대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중단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싶어서 이 토록 과잉방어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최재성 원내부대변인은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385

억원을 빼먹지 않았다면 왜 동업자 김경준의 귀국을 그렇게 목숨 걸고 막는 것인가"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 송환재판과 별도로 김씨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라며 "지난 8월 김씨가 스스로 자신을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귀국의사를 밝히자 이 후보는 현지 변호인이 정상적으로 신문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대변인은 그러면서 신당측에 대해 "미국내 법률적 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이 '김경준 발목잡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의 소지이고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대권 도전 독지행보를 하고 있는 문국현 후보가 14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기정 '창조한국당' 발기인대회에서 손을 들어 지지자들에게 답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국현 신당 시동... 파괴력은?

'창조한국당' 발기인 대회

내달 4일께 창당 완료

법여권 장외주자인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이 14일 신당 창당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문 전 사장은 지난 8월23일 출마선언 후 50여일 만인 이날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가칭) 창조한국당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외연확대를 위한 조직구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행사장에는 1천800석의 좌석이 마

련됐으나 실제 참석자는 2천500여명을 넘기는 등 성황을 이뤘다.

중앙위원 1번을 배정받은 문 전 사장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 8월 출마선언할 때 12척에 불과했던 배가 이제는 함대가 됐다.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세력은 이미 장강과도 같이 대세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영훈이 땅투기에 가있는 사람, 낡은 가치관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국가재창조의 책임을 결코 다할 수 없다"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비판한 뒤 "이제는 창조적 발상과 공동

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사람 중심의 진짜경제'로 가야한다"고 호소했다.

문 전 사장은 이날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사·도당 창당을 거쳐 다음 달 4일께 중앙당 창당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광주·전남 사·도당 창당은 오는 20일 예정되어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전 사장의 지지율이 5%선을 넘나드는데다 대통합민주신당 내에서도 우호적인 의원들이 늘고 있어 그가 법여권 대선정국의 주요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유아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이명박후보 타운미팅 "형편따라 지원책 다양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14일 "개인의 수입과 관계 없이 보육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동작구 구립 참사랑어린이집에서 가진 제9차 타운미팅 '엄마의 출근길이 가벼워집니다'에서 이 같이 밝힌 뒤 "기업이 물건을 팔고 A/S(애프터서비스)까지 하듯이 보육에 대해 적당히 돈만 주고 있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가정 및 근무형태에 따라 여러 맞춤형 정책을 펴겠다"고 보육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14일 "개인의 수입과 관계 없이 보육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동작구 구립 참사랑어린이집에서 가진 제9차 타운미팅 '엄마의 출근길이 가벼워집니다'에서 이 같

이후보는 "우리 나라의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지만 더 넓으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전이 갖춰져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서 "낳는 아이들에 대해 출산신 병원에서부터 5세까지 보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간접회가 시작되자마자 최근 어려운 보육 여건을 반영하듯 참석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 대폭 확충 ▲보육시설 운영시간 연장 등 형태 다양화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을

무 협조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남북 경호기관의 교류를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북측은 긍정적인 뜻을 보이며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남북 경호 기관의 책임자금 면담은 사상 처음 이뤄진 일로,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는 경호 책임자금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靑경호실-北경호기관, 남북 경호교류 추진

정부대 경호실은 지난 2007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호를 책임지는 북한 경호기관에 향후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에 대비해 남북 경호기관 간 교류 추진을 제안했고, 이에 북측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정부대 경호실에 따르면 양상국 경호실장은 지난 3일 오전 백화원 영빈관에서 1차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될 때 영빈관내 별도 회의실에서 북측 경호기관(호위사령부·호위총국) 책임자와 면담한 자리에서 "향후 정례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시 원활한 업

미용성형수술을 성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광주 성형외과 개원의 협의회

■ 전문의 위탁외과는 미래 20년입니다

■ 성형외과 전문의 클리닉 구별입니다

■ 그 르 성형외과 02-7034	■ 퍼플러스 성형외과 02-74079	■ 신세자 성형외과 02-511-1114
■ 김 주 성형외과 02-562-1105	■ 빠디풀 성형외과 02-740-0292	■ 오현근 성형외과 02-800-0000
■ 고대승 성형외과 02-221-6663	■ 퍼플러스 성형외과 02-740-2303	■ 김남 희 성형외과 02-741-4118
■ 김정호 성형외과 02-227-2771	■ 헬 라 성형외과 02-8-7000	■ 고 전 성형외과 02-755-0119
■ 김정숙 성형외과 02-314-7771	■ 허재호 성형외과 02-740-4032	■ 황광재 성형외과 02-775-0675
■ 김희석 성형외과 02-225-6777	■ 신현래 성형외과 02-740-3600	■ 허성원 성형외과 02-741-0300
■ 김희숙 성형외과 02-224-0000	■ 이 성 성형외과 016-6100	

을 열 무안공항 개항소식을 접하는 지역주민들의 감회는 낫다르다.

그러나 무안공항 개항과 함께 꼭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남아 있다. 바로 호남고속철도의 공항 연계문제다. 호남고속철도는 오는 2015년 오송~광주, 2017년까지 광주~목포노선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를 무안공항까지 이으면 현재 설계에서 17km를 연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남도를 비롯해 지역경제인들은 1년여 전부터 정부에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연계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연계 주장의 가장 큰 명분은 '시

/unipark@kwangju.co.kr



박치경
정치부 차장

■ 현장과 시각 ■

경제성 타령은 이제 그만

지난 1997년 첫 삽을 뜯 무안국 제공함이 우여곡절 끝에 오는 11월 8일 개항한다. 지난 10일 공항 설비 시험가동을 무사히 마쳤고 오는 25일에는 실제 비행기 이착륙을 통해 기능을 최종 점검한다.

당초 무안공항은 지난 2003년 문을 열 계획이었지만 감사원이 적자운영 우려를 지적하는 바람에 4년이나 늦어졌다. 그런만큼 서남권에서 중국·동남아로의 하늘길

너지 효과에 모아진다. 즉, 공항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공체 기업도시 조성사업(프로젝트), 무안기업도시, 서남권 종합개발계획 추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남고속철도가 무안공항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호남고속철도가 연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속철과 무안공항을 연결하려면 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한다. 여기에다 서남권 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 고속철 연장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 뻔한데 미리 서두르지 않았다가 나중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염려도 크다.

이처럼 지역에서 느끼는 심각성과는 달리 정부 반응은 미지근하다. 정부는 호남고속철도를 무안공항까지 연계할 경우 7천억원의 시설비가 추가되고 공기도 늦춰질 것이라며 요구를 일단 묵살한 상태다. 고속철과 공항 연계주장이 그치지 않자 이은성 용산교통부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공항 경유에 따른 타당성 조사 응역을 발주해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역 입장에서 보면 응역조사는 큰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 정부가 호남고속철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타당성' 때문이다. 응역조사 결과 경제성이 낮다고 판정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된다.

호남고속철도 연장문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는 정부가 경제논리에 얹매이지 않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유연하게 대처해달라는 것이다. 이미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효과에서 증명됐듯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